

< 要 約 >

I. 러시아 大統領 選舉 結果

- (1차 투표) 5명의 주요 후보가 경쟁하여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자, 젊은 세대, 기업가, 공무원 등의 지지를 얻은 엘친이 35%로 선두에 서고 노인과 연금생활자, 농민의 지지를 받은 주가노프가 32%의 지지를 확보, 엘친과 주가노프가 결선 투표에 진출
- (2차 투표) 레베드 등 군소후보의 지지를 확보한 엘친이 54%의 득표로 과반수를 지지를 확보, 40%에 그친 주가노프에 낙승했으나 反엘친 세력이 적지 않아 향후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주요 과제로 부상

II. 엘친 再選의 背景과 意味

- (재선의 배경) 공산주의의 복귀를 두려워 한 언론 및 서방의 국제적 지원, 정부 정책을 선거 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 주가노프 주장의 재빠른 수용으로 반대세력 희석화, 군소후보의 지지확보, 개혁의 흐름을 거스를수 없다는 일반의 인식이 엘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대안부재론으로 발전하여 초기의 열세를 딛고 승리
- (재선의 의미) 시장 경제 체제의 확립을 지향하는 개혁 정책이 뿌리를 내릴 것이며, 대외 정책면에서 親서방주의 노선의 근간이 지속되어 탈냉전 국제질서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임

< 要 約 >

III. 經濟 改革의 評價와 展望

- (성과와 문제점) 사유화, 가격 자유화, 조세제도 개혁, 금융시장 조직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시장경제체도가 차츰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과 관행의 미비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경제 동향) 생산과 투자의 극심한 위축, 실업 증가로 비관적이나 최근 물가 안정세와 교역 증대로 점진적인 경제 회복이 기대됨
- (향후 정책 전망) 엘친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실리 추구의 외교, 대내적으로는 긴축 재정과 경제 안정화를 통한 시장경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 교역 확대와 세계 경제권에의 편입 가속화 등을 지향해 나갈 것임

IV. 韓·러 經協 展望

- (한·러 경험의 평가) 수교 이후 한·러 관계는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경험 관계 또한 빠른 속도로 정착·확대되어 왔으나 아직 양국의 경제 규모나 성장 잠재력에 비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전망) 엘친의 재선이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한·러 교역 증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간 경험이 확대되고 동북아 지역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韓러 교역 및 투자 활성화가 예상됨
- (경협 확대 방안) 투자 분야 확대, 국영기업 민영화 적극 참여,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참여, 러시아 첨단 기초 과학기술의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I. 러시아 大統領 選舉 結果

- (1차 투표) 5명의 주요 후보가 경쟁하여 大都市 지역의 高學歷者, 젊은 세대에서 35%의 지지를 얻은 엘친과 노인, 年金 生活者, 農民 등으로부터 32%의 지지를 얻은 주가노프가 결선 투표에 진출
- (2차 투표) 레베드 등 군소후보의 지지를 확보한 엘친이 54%의 득표로 과반수를 지지를 확보, 40%에 그친 주가노프에 낙승

1. 1차 투표 결과

- 도시거주자, 고학력자, 젊은이, 기업가, 공무원의 지지를 받은 엘친의 신승
- 5명의 주요 후보가 경쟁하여 35%의 지지를 얻은 엘친과 32%를 얻은 주가노프가 2차 투표에 진출
 - 엘친은 선거전 초기에 고전하였으나 공산주의 복귀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엘친의 지지가 급상승

<표 1> 1차 투표 결과 (투표율 69.8%)

후보자	주요 경력	정책노선	지지층	득표율
엘친 (65세)	대통령	경제 자유화, 시장경제체제 지속, 사유화	100만이상 대도시 거주자 기업가, 경제관료, 30-40대 고학력 고소득층	35.0
주가노프 (52세)	공산당 당수	기본산업 재국유화, 보호무역주의, 경제의 국가통제, 구소련 부활 개혁 지속,	60대 이상 연금생활자, 소도시, 농촌거주자 개혁소외세력	31.9
레베드 (46세)	전 제14군 사령관	자국 산업 보호, 체첸 독립	40-50대 중소도시 거주자 군부 및 군수산업체 종사자	14.7
야블린스키 (44세)	예비역 중장 개혁적 경제학자	급진 개혁정책 토지 사유화	30-40대 고학력층, 대도시 거주자	7.4
지리노프스키 (60세)	야블로코 당수 자유민주당 당수	국가의 경제개입 축소 구소련 부활, 극우 민족주의, 강력한 러시아건설	20-30대 초등교육 이수자 저소득층, 농민	5.8

- 엘친과 주가노프의 지지 계층과 지역
 - 엘친의 지지층은 고학력자, 젊은 세대, 독립 자영업자, 기업가, 군인, 공무원 등 개혁 지지세력으로 정부 기관이 밀집해 있고 지식인이 다수 거주하는 대도시와 공업이 발전된 서북부, 극동지역이 주요 지역 기반임
 - 주가노프 지지층은 저학력자, 구세대, 정부 보조금 삭감에 불만인 연금 생활자, 농촌 거주자 등으로 軍産複合 산업지대인 중부와 전통적 농촌 지대인 남부에 주로 분포

2. 2차 투표 결과

레베드 등 군소 후보의 지지를 얻어낸 엘친의 낙승

- 엘친 54% 주가노프 40%: 레베드 등 군소 후보의 지지를 확보한 엘친이 여유있는 승리를 거둠
- 엘친의 승리로 개혁 노선이 국민의 신임을 얻어 시장 경제 제도의 정착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함
- 공산당과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와의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있음

<표 2> 엘친과 주가노프의 주요 정책 비교

	엘 친	주 가 노 프
경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 견지 - 민영화정책을 다소 수정하여 추진 - 외국인 투자 촉진 - 수입은 국내 산업과의 균형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입을 강화한 시장경제의 유지 - 부당하게 민영화된 기업 재국유화 - 전략물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 다양한 소유형태를 과도적으로 용인
사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불 연금과 임금의 조기지급 및 사회보장의 충실화 - 부패 독직의 척결 - 사회보장을 고려한 재정안정화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과 최저임금의 대폭증액 및 미지불 해소, 사회보장 우선 - 범죄와 부패의 억제 - 국민을 빈곤화시키는 개혁은 저지
외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서방 편중외교 지양 및 국익중시 - 나토의 동방확대를 적극 저지 - CIS의 통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에 대한 경계의식 - 나토 확대 적극 저지, 국익 우선 - 소련 소멸 선언 무효화

II. 엘친 再選의 背景과 意味

- (재선의 背景) 공산주의의 復歸를 두려워한 言論 및 西方의 국제적 支援, 정부 정책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 주가노프 주장의 재빠른 수용으로 반대세력 희석화, 群小후보의 지지 확보, 개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일반의 인식이 엘친 外 代案 不在論으로 발전하여 초기의 열세를 딛고 승리
- (재선의 意味) 시장경제체제의 改革이 뿌리를 내리고 기존의 親서방적 대외 정책의 지속으로 脫冷戰 국제 질서의 安定化

1. 엘친 재선의 배경

공산당 회귀, 개혁 지지세력의 단합, 대빈민정책 강화, 서방의 국제적 지원, 중간파의 대안 부재론 등이 엘친 재선의 배경

- (승리 요인) 군소 후보의 지지 획득, 언론과 정부 관료의 지원, 주가노프 지지자 끌어안기, 서방의 국제적 지원, 대안 부재론
 - 1차 투표에서 모두 28%의 득표를 얻은 레베드, 야블린스키, 지리노프스키 등 군소 후보의 지지를 확보
 - 특히 15%의 득표율을 보인 민족주의 성향의 레베드를 부총리급으로 영입, 민족주의 지지세력을 흡인
 - 언론의 노골적인 엘친 편들기
 - 舊시대로의 회귀를 두려워한 언론의 엘친 중심 선거 운동 보도 및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감 유포
 - 주가노프의 지지세력인 빈곤층, 연금생활자, 농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조치
 - 체불 임금의 즉각적 지불, 연금 20% 인상
 - 농업위기 극복과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정부, 관료, 언론의 선거 활용
 - 선거 입후보 및 캠페인, 투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 정부 행정 관리들의 지지
 - 공산주의 집권을 우려한 서방의 국제적 지원
 -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은 G7 핵안전 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개최하고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접

- IMF는 1백억 달러 차관 약속, 파리 클럽은 러시아의 對서방 외채상환 연기, 독일과 프랑스는 체불임금 청산용으로 30억 달러 지원
- 대안 부재론: 공산당의 집권으로 '강압과 복종, 공핍과 무기력'으로 상징되는 舊체제의 회귀를 두려워한 일반 유권자의 엘친 外 대안 부재론의 확산

2. 엘친 승리의 의미

시장 경제 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개혁파의 보수파에 대한 승리

○ (국내적 의미) 시장경제체제의 개혁이 뿌리를 내리게 됨을 의미하며 정치적으로는 개혁파의 보수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함

- 소련 공산주의 부활 우려를 불식하고 민영화, 사유화, 가격 자유화 등을 핵으로 하는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 개방과 개혁을 추구하게 되었음
- 保革 葛藤에서 개혁파의 승리를 의미
 - 주가노프의 적지 않은 지지표를 의식하여 공산당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수용하는 개혁 노선의 궤도 수정이 예측됨

러시아의 친서방 민주국가로서의 위상 지속, 탈냉전 국제질서 안정화에 기여

○ (국제적 의미) 러시아 親서방 민주 국가의 역할 지속으로 탈냉전 국제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러시아 팽창주의나 모험주의의 우려를 불식

- 공산당 지배하의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좌파부활의 서곡이 될 수도 있어 탈냉전기 세계질서에 위협요인
- 주가노프 당선시 나토 확대와 관련한 서방과의 충돌, 전략무기 감축 협정 비준의 애로, 중국과 함께 對서방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왔음.
 - 엘친의 대외 정책은 親서방주의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미하여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임

III. 經濟 改革의 評價와 展望

- (성과와 문제점) 私有化, 價格 自由化, 租稅制度 개혁, 金融市場 조직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시장경제체도가 차츰 定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制度和 慣行의 未備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경제 동향) 생산과 投資의 극심한 萎縮, 失業의 증가로 비관적이나 최근 物價 안정세와 交易 증대로 점진적인 경제 回復이 기대됨
- (향후 정책 전망) 열린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實利 外交, 경제적으로는 緊縮 재정과 경제 안정화를 통한 市場經濟 개혁의 계속적 추진, 世界 經濟圈에의 편입 가속화를 지향하고 있음

1.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국영기업의 민영화
 화율 상당히
 진척, 경영의 효
 율화와 경쟁력
 강화 실패

- (사유화) 92년 이후 국유기업의 과감한 사유화정책 추진으로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가 책임이나 효율성 증대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어 시장경제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95년 6월말 현재 전체 국유기업의 75.5%인 17,455개 기업이 사유화되고 94년도 국내 총생산중 62%가 非국유 부문에서 생산됨
 - 민영화된 기업의 80%는 해당 기업의 노동자나 구체제의 경영층이 소유권을 계승, 경쟁체제 도입에 실패
 - 토지 소유권 문제가 아직 미해결이며 집단농장의 사유화는 별 진전이 없음

가격자유화의 급
 진적 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으나 최
 근 완화 경향

- (가격 자유화) 92년 초의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 조치 이후 상품 가격 및 이자, 임금 결정에서 시장 메카니즘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부산물로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으나 현재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
 - 부분적 가격제한의 지속적 해제로 현재 전체 상품 중 80% 이상의 품목에 자유 가격이 적용되고 있음.
 - 92년 초 급진적 가격 자유화의 실행으로 촉발된 초인

플레이션 현상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음

은행과 주식시장의 정착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와 규제적 관행으로 실질적 시장기능 수행에는 개선여지가 많음

○ (시장경제제도의 정착) 은행, 보험, 증권업 등이 93년 중반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등 시장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중이나 제도와 관행, 의식은 아직 미비

- 주식투자 붐으로 선진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러시아 주식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준비, 즉 조세 정책, 상법, 재산권 행사에 관한 법률 미비로 자본도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 지급 등 舊시대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 왔음.
 - 관료의 부패와 마피아의 기업 순익의 일부 요구 등으로 정상적 기업 활동에 애로가 있음

소득 격차의 증가로 빈곤층이 증가, 개혁 반대 세력화

○ (소득 분배) 소득의 편중이 심각하여 빈곤층이 개혁 세력화하는 결과를 초래

- 95년 소득 수준 상위 10% 그룹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31%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그룹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5%에 불과하며 전국민의 60% 이상이 평균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음

2. 러시아 경제 동향

생산과 투자의 극심한 감소와 실업의 증가

○ (경제 침체) 경제 체제의 급격한 전환, 舊사회주의 권 시장의 상실,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된 경제 침체와 불안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95년 러시아 GDP는 실질 가격으로 1990년의 약 60% 수준이며 투자는 이보다 빠른 속도로 격감하여 산업 생산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음
- 9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대외 교

역량이 94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였으며, 95년에 들어서도 대외 교역의 증가세는 계속되어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9%의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95년 말 현재 공식 등록된 실업자 수는 약 233만 명 (3.2%)이나 ILO의 추정에 의하면 590만 명으로 실질 실업률은 8.1%로 집계됨

<표 3> 러시아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전년대비 증가율, %)

거시 지표	1991	1992	1993	1994	1995
국내총생산(GDP)	-5.0	-14.5	-8.7	-12.6	-4
공업생산(대·중규모기업)	-	-18.8	-15.5	-22.8	-5
공업생산(소규모기업 포함)	-8.0	-18.0	-14.1	-20.9	-3
농업생산	-4.5	-9.4	-4.4	-12.0	-8
투자	-15.0	-40.0	-12.0	-24.0	-13
주택건설	-19.9	-16.0	0.7	-6.2	9
무역 (달러, CIS 역내무역제외)					
수출	-28.4	-16.7	4.5	13.1	25
수입	-45.6	-16.9	-27.6	5.6	12
소비자물가 (연말기준 전년동월대비)	160	2,510	840	320	131
실업률(연말기준)	0.1	0.8	1.1	2.2	3.2
월평균 임금(루블)	548	5,995	58,663	220,351	482,000

자료 : 러시아東歐貿易會, 『經濟速報』, 1996. 2.25., p. 5.

Goskomstat, *Sotsial'no-Ekonomicheskoe Polozhenie Rossii*, No. 12, 1995.

최근 몇 년간의
극심한 경제 침
체이후 침체폭이
낮아지고 물가가
안정

○(경제 회복의 희망) 96년을 전후하여 러시아 경제는 90년 이래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위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96년에는 공업생산과 국내 투자의 감소폭이 크게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2~5%에서 안정 예상

- 95년 러시아의 대외교역은 수출입 모두 5% 내외로 증가 예상

3. 신정부의 정책 전망

민족주의화, 보수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실리추구 외교를 전개할 것임

○ (대외 정책)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저하에 대한 반발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개혁의 성공을 위한 외국의 투자 지원을 위해 일면 강경 일면 실리 추구의 양면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할 것임

- NATO의 확장, 유고 내전 처리 과정에서의 위상 저하, 미사일 인도 판매 봉쇄 등으로 훼손된 국가적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실익없는 親서방 정책을 재검토
- 그러나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과 군사비 감축이 필수적이어서 대외 강경책은 한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리정책을 추구할 것임
- 대외 정책 보수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WTO 가입 의사 표명, 대외 무역 증가 추세, 외국인 투자 유치 시도로 대외 경협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됨
- 엘친은 신정부의 총리에 92년 말부터 총리를 맡아온 온건 자유주의자 체르노미르딘을 재임명, 대내외 정책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엘친 신정부는 재정 적자 축소, 조세제도 보완,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시장 발전방안 제시

○ (국내 경제) 지금까지의 시장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긴축 재정, 조세 제도 개선,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에 중점

- (조세·재정) 조세 체제 개편을 통한 재정 적자 축소
 - 조세 종류의 축소 및 과세 대상액 산정 단순화
 - 조세 특혜의 대폭 축소

- (금융) 민간 자본의 해외 도피 방지로 투자 활성화
 - 은행 금리의 적정수준 유지로 국민 저축 적극 유도
 - 루블화의 태환성을 보장하여 외환거래 자유화
 - 주식시장, 투자기금, 리스산업의 활성화
- (경제 안정) 시장경제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물가 억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 (사유화) 사유화의 원래 목적인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유화가 부진한 토지 사유화의 계속적 추진
- (농업) 농업체 지원과 농업 개혁을 통한 생산 증대
- (사회) 그간 개혁에서 소외된 사회보장책 강화 방안으로 인플레이로 인한 저축 손실 보전, 임금 체불 방지
- 선거 기간중 엘친이 약속한 농민과 하층민을 위한 제반 사회보장적 조치는 재정 적자로 인하여 선거가 끝난후에도 충실히 집행될 지 의문임

WTO 가입, 외국인 투자 촉진,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으로 국제경쟁력 배양

○ (대외 경제) 수출세 인하와 수입관세 합리화, WTO 가입 노력 등으로 세계경제권 편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 배양

- (통상) 교역 증진 조치의 점진적 시행
 - 수출세 인하 등 수출 촉진 정책
 - 수입관세 부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IMF의 압력과 WTO 가입을 위한 점차적 관세인하 예상
 - 세계 경제권에의 편입을 위해 WTO에 가입 신청
- (산업) 우주, 항공, 신소재 등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과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수요가 막대, 기계류 및 플랜트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자유경제 특구에 관한 법」 과 「외국인과의 이전협약에 관한 법」 이 현재 하원에 계류중

IV. 韓·러 經協 展望

- (경협 評價) 수교 이후 한·러 관계는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경협관계 또한 빠른 속도로 定着·擴大되어 왔으나 양국의 경제 규모나 성장 잠재력에 비해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경협 影響)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한·러 교역 증가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對러 교역 및 投資 活性化가 예상됨
- (경협 擴大 方案) 투자 분야 확대, 국영기업 民營化에 참여, 극동 및 시베리아 資源開發 참여, 첨단 基礎科學 기술의 商用化에 적극 참여가 바람직함

1. 경협 현황과 평가

한·러간에 교역 확대 여지가 많으나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량이 적음

○ (개관) 수교 이후 한·러 관계는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경협 관계 또한 빠른 속도로 정착·확대되어 왔으나 양국의 경제 규모나 성장 잠재력을 비추어 볼 때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수교 첫해인 90년 우리의 구소련 전체와의 교역액은 8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95년 한·러 교역액은 34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한·러 경협관계는 더욱 확대 발전의 소지가 있음
 - 양국간 교역이 각국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경우 1.8%, 러시아의 경우는 2.5% 수준
 - 양국간 투자도 대부분 소규모 시험적 투자의 성격
 - 우리의 對러 지하자원 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개발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제조품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의 급성장

○ (교역) 양국간 교역은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90년 이후 한·러 교역은 92년을 제외하면 매년 40~80%가 증가해 왔으며 95년 양국간 교역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33억 달러에 달함

- 우리 나라는 전기·전자제품, 기계류와 섬유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 원료·재료(철강·금속제품), 1차산품(농림수산물, 광산물)과 화학공업생산물 등을 수입하는 전반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

<표 4> 한국의 對러시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90	'91	'92	'93	'94	'95
총교역량	888.8	1,202.4	859.1	1,576.0	2,191.6	3,308.8
수출	159.2	625.1	364.6	601.2	961.9	1,415.9
수입	369.7	577.3	494.5	974.9	1,229.7	1,892.9
무역수지	-210.5	47.8	-129.9	-373.7	-278.7	-477.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는 시베리아 극동 지역 원자재 수입 및 자원 개발의 소규모 투자가 주종

- (투자) 원자재 수입이나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무역업, 제조업, 수산업 중심의 소액 투자가 주종을 이룸
- 對러시아 직접투자 건수(허가 기준)는 매년 증가하여 95년말 현재 對러시아 투자는 허가 기준으로 79건 (US\$106백만)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투자 건수로는 67건(US\$78백만)임
 - 對러시아 투자는 대부분 백만 달러 미만의 소액투자
 - 수산물 가공, 선박 수리, 삼림 벌채 등 주로 원자재 수입이나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투자 진출이 가장 많으며 시베리아 극동지방에 6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표 5> 한국기업의 연도별 對러시아 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년 도	총 허 가 ¹⁾		총 투 자		투 자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0	5	16,787	5	16,787	5	16,787
1991	2	732	2	732	7	17,519
1992	8	5,455	8	5,455	15	22,974
1993	17	2,522	17	2,522	32	25,496
1994	26	35,767	18	21,919	50	47,415
1995	21	44,638	17	18,526	67	65,941
합 계	79	105,901	67	65,941	67	65,941

주 : 1) 총허가는 한국은행에서 허가한 건수 및 금액임.

자료 : 한국은행

2. 韓·러 經協에의 波及 效果

러시아의 최근 대북 접근은 한·러관계에 손상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최근의 對韓 정책) 최근 북·러관계 개선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한·러 관계에 손상을 주는 정도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 러시아는 남한 중시의 한반도 정책을 남한 정부에 대한 영향력 감소 원인으로 판단, 최근 북·러관계 개선을 통해 對韓 영향력 확대 시도
 - 1994년 중반부터 고위관료, 정치인의 북한 방문
- 러시아는 한국의 대북 관계 및 통일 과정에 영향력이 큰 대국으로 소홀히할 수 없음. 러시아도 북·러관계 강화로 얻는 경제적 실익이 없어 한·러 관계 악화를 초래할 정도까지 대북 관계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임
 - 최근 대외정책이 보수화되면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긴밀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대동

북아 지역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며, 이를 한국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예상 ○ (엘친의 재선과 한·러 경협)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한·러 교역 증가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對러 교역 및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 양국간 교역은 러시아측 정치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양국간의 교역은 계속 확대될 것임
 - 양국간 총교역액은 최근 5년 사이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음. 96년 1-4월 사이의 교역액은 12억 8천5백만불을 기록하여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5% 이상의 급증세를 보임
- 러시아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양국간의 교역 구조가 보완적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임
- 러시아의 개혁정책이 지속되어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세반 조치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지난 6월 엘친은 루블화의 태환성 확보, 조세체제 개편 및 기업의 투자 자원 조달 원활화를 위한 주식 시장의 육성 방안 등 투자 촉진책을 발표
 - 민영화와 시장개방이 계속되어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경제성장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단, 러시아의 시장 개혁이 성공하는데 관건인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교역이나 투자가 단기간에 큰 증가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임

3. 經協 擴大 方案

- 투자 유인을 활용하여 광대한 러시아 시장개발
- (러시아 투자 진출의 확대) 러시아의 경제 회복 기미를 이용하여 광대한 러시아 시장 개척
 - 대러 투자 진출의 형태는 현지인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소규모 합작기업 설립 방식이 주종이었음
 - 조만간 러시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기지로도 활용
 - 자동차, 전자, 섬유는 물론 전기, 통신 등 기간산업 및 건설 등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에 참여
- (국유기업 민영화에 참여 확대) 러시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 투자 유망
 -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러시아정부에 의해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적극 추진되고 있음
 - 94년 7월 이후 국유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현금에 의한 주식공개 매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최근 외자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석유·천연가스, 전력, 통신 등 유망기업들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바, 이들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 참여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 진출 도모.
 - 군수산업 관련 기계설비 및 부품제작 기업의 사유화에 참여하여 기술 도입과 상업화에 적극 참여
- 극동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은 개발 절차가 복잡하고 인프라가 미비하나 주요 자원의 선점 차원에서 시도해 볼만 함
-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개발참여) 개발 절차가 까다롭고 인프라가 미비한 것이 흠이나 장기적 자원 공급선의 선점 측면에서 고려 가치가 있음
 - 이 지역은 방대한 지하자원 매장지로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공급선으로 확보해야 할 것임

- 현재 이 지역 자원개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자원 개발 관련제도의 미비로 개발 절차가 까다로우며, 인프라 부족으로 채굴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나 자원 개발의 선점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됨

러시아의 첨단 기초 과학기술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 (첨단 기초 과학기술의 이전과 상용화) 경제 사회적 불안으로 기초과학에 충분히 투자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에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러시아는 세계적인 첨단 기초 과학기술 보유국이며 러시아 경제사정의 악화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도입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도 높음
-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 보유 연구소에의 접근 및 인력의 해외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 및 기초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이를 장기적인 공동프로젝트로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함

(오 삼교)